



의안번호	제 2021 - 23호
보 고 연 월 일	2021. 12. 6. (제113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1
II. 양형위원 위촉장 전수식 개최	2
1. 개요	2
2. 신임 양형위원 위촉장 전수식 개최	2
III. 신규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신규 자문위원 회의 개최 3	
1. 개요	3
2. 신규 위촉	3
3. 신규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3
4. 신규 자문위원 회의	3
5. 자문위원 명단	4
IV. 2021년도 국정감사 수감	5
1. 개요	5
2. 주요 보고내용	5
3. 주요 질의 및 답변내용	5
V.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의 교류·협력 협정식 개최	11
1. 추진배경	11

2. 협정식 개최	11
3. 협정 주요 내용	11

VI. 양형위원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 심포지엄 결과 보고 · 12

1. 개요	12
2. 행사 개요	12
3. 심포지엄 일정	12
4. 심포지엄 주요내용	13

VII. 양형기준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26

1. 개요	26
2.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 회신	26

VIII.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 53

1. 개요	53
2. 관련 규정	53
3. 공개 방법	54
4. 추진 일정	54

IX. 2020 연간보고서 발간 · 배포 55

1. 개요	55
2. 추진 경과	55
3. 발간 내역	55
4. 국회 보고	55
5. 기타 기관 배부	56

X.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보고	57
1. 개요	57
2. 분석 목적	57
3. 분석 대상	57
4. 분석 내용	57
 XI. 전자표결시스템 도입	 58
1. 도입 배경	58
2. 전자표결시스템 방식	58
 XII. 2022년도 운영지원단 업무 계획	 59
 XIII.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69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69
2.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	74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 회의	제143차	2021. 11. 22.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권고 형량범위 논의○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논의○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 검토

II. 양형위원 위촉장 전수식 개최

1. 개요

-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되어 위촉장 수여식을 가지지 못했던 김관정, 이근수 위원(2021. 7. 5. 위촉)과 박준우 위원(2021. 9. 2. 위촉)에 대한 위촉장 전수식을 개최함

2. 신임 양형위원 위촉장 전수식 개최

- 일 시 : 2021. 12. 6.(월) 15:30
- 장 소 : 대법원 1601호
- 위촉대상자 : 김관정, 이근수 위원(2021. 7. 5.자)
박준우 위원(2021. 9. 2.자)

III. 신규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신규 자문위원 회의 개최

1. 개요

-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방법 이외에도 운영규정 제27조 제2항에 따라 다양한 직역의 인사들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양형기준 설정 및 변경을 비롯한 양형위원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자문위원단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교육계, 노동계,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직역의 명망가·전문가로 구성

2. 신규 위촉

- 김균미, 김기현, 김정환, 김주하, 박근양, 백범석, 안성훈, 양현아, 이경원, 이경은, 장현정 위원을 2021. 8. 21. 각 신규 위촉

3. 신규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 일시 : 2021. 11. 16.(화) 11:00
 - 장소 : 대법원 1605호 무궁화홀
 - 참석 범위 : 위원장, 상임위원, 운영지원단장
 - 위촉대상자 : 김기현, 김정환, 김주하, 박근양, 백범석, 안성훈, 양현아, 이경은, 장현정 위원
- ※ 위촉대상자인 김균미, 이경원 위원은 사정으로 불참

4. 신규 자문위원 회의

- 일시 : 2021. 11. 16.(화) 11:10
- 장소 : 대법원 1605호 무궁화홀
- 안건 : 양형위원회 소개,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5. 자문위원 명단(음영과 파란색 표시는 신규 자문위원)

분 야	성 명	소 속	최초위촉일
학 계	문 채 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6. 01. 07.
	고 문 현	승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18. 12. 10.
	이 숙 진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0. 07. 02.
	이 상 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8. 12. 10.
	장 영 민	(前)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8. 12. 10.
	고 학 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7. 08. 21.
	석 인 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 07. 02.
	백 범 석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교수	2021. 08. 21.
	양 현 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 08. 21.
	김 정 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 08. 21.
	김 기 현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1. 08. 21.
언론계	이 경 원	국민일보 법조팀장	2021. 08. 21.
	김 균 미	서울신문 대기자	2021. 08. 21.
	김 주 하	MBN 특임이사, 앵커	2021. 08. 21.
시민사회단체	박 근 양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	2021. 08. 21.
	이 경 은	국경너머인권 대표	2021. 08. 21.
공공기관	안 성 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사법개혁연구실장	2021. 08. 21.
법조계	장 현 정	한국여성변호사회 청년부회장/ 법무법인 예울 대표변호사	2021. 08. 21.

IV. 2021년도 국정감사 수감

1. 개요

- 2021. 10. 1.(금) 10:00 대법원 401호 대회의실에서 2021년도 국정감사 실시
- 위원장이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을 서면 보고하고, 법제사법위원장 및 법제사법위원들의 구두 질의와 서면 질의에 답변

2. 주요 보고내용

- 양형위원회 현황, 2021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 및 향후 계획

3. 주요 질의 및 답변내용

(1) 구두질의와 답변

- [송기현 위원 질의] 각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2개가 공통적으로 감경요소에 포함되어 있음. 성범죄의 경우는 71%가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감형이 되었고, 살인범죄, 강도범죄 역시 55%, 70%가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감형이 되었음. 재판을 할 때 반성을 했다는 것을 보통 무엇을 근거로 판단을 하는 것인지 궁금함. 반성문이 대필한 것이거나 구매한 것이라면 진지한 반성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의문임
- － [양형위원회 위원장 답변] 대필한 반성문이나 구매한 반성문 등은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만들 수 있을지는 양형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보겠음

○ [김영배 위원 질의] 성범죄가 최근에 10년간 56%가 폭증을 했음. 양형기준이 많이 상향이 됐는데도 집행유예가 2010년도에는 46%였던 것이 2019년도에는 59%로 오히려 상당폭 증가했음.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성범죄는 신고 되지 않는 범죄가 훨씬 많다고 함. 또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감경요소로 ‘초범’이 들어가는 게 적절치 않고, ‘진지한 반성’도 이스라엘 사람들 무덤 앞에 무릎 꿇은 독일 총리처럼 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

－ [양형위원회 위원장 답변] 진지한 반성에 대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을 재판하는 법관의 양형 심리에 의해서 결정됨. 위원님 지적과 같이 반성문의 내용만 믿고 감형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들어서, 양형기준에 포함된 ‘진지한 반성’ 양형인자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만들어 불지를 양형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보겠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경우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한 범행은 제외되는 것으로 그 적용 요건을 강화하였음. 위원님 문제 의식은 공감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소병철 위원 질의]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기사 댓글 보면, 국민들께서는 전혀 법원의 노력에 공감을 못하고 있음. 자동차를 음주 상태에 운전하는 것은 살인 병기를 가지고 길거리를 다니는 것임. 이 부분에 대해서 양형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도 국민들이 이렇게 불만, 비판, 사법부에 대한 불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불신까지 일어

나는 상황에 대해서 양형위원회 위원장의 견해를 말씀 주시기 바람

- [양형위원회 위원장 답변] 2020년에 교통사고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하였음. 제8기 양형위원회가 출범하면서 2년간의 추진 업무를 논의할 때 권고 형량범위를 조정할지를 포함하여 교통사고 양형기준 전반을 검토하기로 수정하기로 결정했음. 교통사고 양형기준을 수정할 때 위원님의 염려나 의견을 참고하고 다른 양형위원님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음

○ [이수진 위원 질의]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현황이 아주 낮음. 자유형은 55% 내지 56%까지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데 재산형의 경우에는 3%, 3.5%에 불과함. 법원에서는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임. 벌금형에 대해서 양형기준이 있는지 궁금하고, 적극적으로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서면심리인 약식명령에도 벌금형 집행유예가 활용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 [양형위원회 위원장 답변] 현재 벌금형 양형기준은 선거범죄에만 설정되어 있음. 제8기 양형위원회가 출범하면서 2년간 추진할 업무 중 하나로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을 선정하였고, 전반기에는 벌금형 양형기준 원칙을, 후반기에는 구체적인 범죄군에 대해서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할 예정임

○ [윤한홍 위원 질의] 일반범죄는 양형기준 준수율이 90%가 넘는데, 화이트칼라 범죄를 보면 양형기준 준수율이 80% 밑으로 내려옴. 법

원이 일반범죄보다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기준을 잘 안 지키고 있다, 가진 자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음

- [양형위원회 위원장 답변] 양형위원회도 양형기준 준수율을 늘 확인하는데 범죄군별로 양형기준 준수율 편차가 있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권고 형량범위 설정 과정에서 규범적 조정으로 다소 형량범위를 올려 둔 것을 재판하는 법관들께서 다소 형량이 높다고 느끼는 것 같음.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음

(2) 서면질의와 답변

- [김용민 위원 질의] 많은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벌금형보다는 오히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더욱 많았을 것으로 예상). 위와 같은 저조한 벌금형 집행유예 현황은 선고유예와 차별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존에 선고유예 될 사건이 일부 집행유예로 유입된 것일 뿐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있음(양량해, ‘벌금 집행유예 확대를 위한 형사정책적 방향’, “법학논고” 제69집, 2020). 그럼에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발행하는 「양형기준」에는 선거범죄 제외하고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준만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로 선고형이 벌금형인 범죄나 벌금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양형위원회 서면 답변]

- 2021. 4. 출범한 제8기 양형위원회는 2021. 6. 7. 제110차 전체회의에서 제8기 양형위원회 임기 내 추진 업무 중 하나로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을 선정하였음. 제8기 양형위원회는 임기 전반기(2021. 4.~2022. 4.)에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을 결정하고, 임기 후반기(2022. 4.~2023. 4.)에 구체적인 범죄군을 정하여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을 진행할 계획임
- 벌금형 양형기준을 논의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벌금형 집행유예 기준을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양형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음

○ [최강욱 위원 서면 질의] 벌금이 많으면 탕감도 많은 이상한 노역계산법

- 허재호 황재노역 사건 이후 대법원은 1억 원 이상 선고 사건은 벌금액의 1000분의 1을 기준으로 노역 일당을 적용하기로 결정
- 현행 벌금형 양형기준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노역일수와 일당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함. 현행 대법원 결정으로 황재노역, 귀족노역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함
- 박근혜 벌금 180억 원, 3년 기준 하루 노역일당 1,683만 원
- 최순실 벌금 200억 원, 3년 기준 하루 노역일당 1,826만 원
- ‘21년 6월 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8기,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논의 진행 및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함

[양형위원회 서면 답변]

- 2021. 4. 출범한 제8기 양형위원회는 2021. 6. 7. 제110차 전체회의에서 제8기 양형위원회 임기 내 추진 업무 중 하나로 ‘벌금형 양

형기준 설정'을 선정하였음. 제8기 양형위원회는 임기 전반기(2021. 4.~2022. 4.)에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을 결정하고, 임기 후반기(2022. 4.~2023. 4.)에 구체적인 범죄군을 정하여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을 진행할 계획임

V.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의 교류·협력 협정식 개최

1. 추진배경

- 양형위원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문유경)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한 발전 도모
- 주요 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
-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 교환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 교류

2. 협정식 개최

- 일 시 : 2021. 10. 22. (금) 11:25
- 장 소 : 1605호 무궁화홀
- 참 석 : 양형위원회 위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상임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부원장, 젠더폭력연구본부장

3. 협정 주요 내용

- 협정 기관은 다음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 공동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
 -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 그 밖의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VI. 양형위원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 심포지엄 결과 보고

1. 개요

-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였음
- 젠더폭력 범죄를 양형 측면에서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학계와 실무계, 국민들 의견을 수렴

2. 행사 개요

- 주 제 :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
- 일 시 : 2021. 11. 8.(월) 14:00 ~ 18:00
- 장 소 : 대법원 1층 대강당
- 방 청 : 유튜브를 이용한 온라인 중계 방식

3. 심포지엄 일정

시 간		내 용	
13:30~14:00	식 전 행 사	출석(오프라인) 또는 접속(온라인) 확인	
14:00~14:10		개회식	사회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인사말(각 3분)	1. 양형위원회 위원장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3. 양형연구회장
		회의 정리(1분)	
14:10~15:50 [100분]	◆ 제1세션 「소주제: 젠더 폭력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 사회 : 조현욱 (변호사, 양형연구회 부회장)		
14:10~14:50 [40분]	주 제 발 표	•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젠더 폭력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	
14:50~15:05 [15분]	지 정 토 론	• 김영미 (법무법인 송인 변호사)	
15:05~15:20 [15분]	지 정 토 론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15:20~15:35	지 정 토 론	• 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시 간		내 용	
	[15분]		
	15:35-15:50	플로어토론	
15:50-16:10		중간 휴식	
16:10-17:50	[100분]	◆ 제2세션 「소주제: 젠더 폭력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개선방안」 사회 :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16:10-16:50	[40분]	주 제 발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젠더 폭력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개선방안」
16:50-17:05	[15분]	지 정 토 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재남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 의정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17:05-17:20	[15분]	지 정 토 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17:20-17:35	[15분]	지 정 토 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7:35-17:50		종 합 토 론	
18:00		◆ 폐회	

4. 심포지엄 주요내용

(1) 1세션 「젠더 폭력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 - 주제발표 및 토론

(가)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젠더폭력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

○ 젠더폭력 실태

- 성폭력 피해 관련

- 2019년 기준 평생 성폭력 피해(강간, 강간미수, 성추행, 음란전화 등, 불법촬영, 불법촬영 유포, 성기노출 등 피해) 경험률은 25.7%이며, 여성 38.6%, 남성 13.4%임. 여성은 약 2.6명 중 1명이 평생 성폭력 피해를 1회 이상 경험하며, 남성

은 약 7.5명 중 1명이 평생 성폭력 피해를 1회 이상 경험

-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인구 10만 명 당 성범죄 피해 건수와 범죄통계 상 발생건수의 차이는 2007년(113.3배)에 비해 2019년(18.5배)으로 올수록 많이 좁혀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많은 암수 범죄가 존재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음
- 지난 10년 동안에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51.6% 증가한 가운데 어렵게 사건화된 성폭력 사건들은 검거된 피의자 중 절반 정도만 검사에 의해 약식재판이나 정식재판이 청구되고 있으며, 제1심 형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비율은 30%에 미치지 못함

- 가정폭력 피해 관련

- 2019년 기준 배우자 있는 여성의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통제 피해 경험률은 28.9%로,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 약 3.5명 중 1명이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또는 통제 피해를 1회 이상 경험
- 가정폭력 사건 중 50%는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등 불기소로 끝나거나 40%에 가까운 사건들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있으나, 이 중 40% 가까이는 보호처분마저 내려지지 않고 종결되고 있음. 고작 9% 정도의 사건만이 기소되고 있으나 종국재판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가벼운 벌금이나 집행유예 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음

- 성매매 관련

- 지난 3년간 온라인에서 원치 않은 성적 유인 피해를 당한 경험 비율은 전체의 11.1%, 만남 유인 피해까지 경험한 비율은 전체의 2.7%였고, 위기청소년(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센터 등 방문 청소년, 소년원생 등, 166명) 대상 조사결과, 조건만남을 경험한 비율은 47.6%(79명)임
- 성인남성(1,500명) 대상 조사 결과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성구매한 경험 비율은 42.1%로 2016년 50.7% 대비 8.6%p 감소, 성인남녀(2,300명) 대상 조사 결과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인지율은 88.5%로 '16년 83.9% 대비 4.6%p 증가
-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 2019년 1,200명을 대상으로 스토킹 인식 및 경험 관련 국민패널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1.1%가 스토킹을 직접 경험하였고 27%가 지인의 스토킹 사건을 통해 간접 경험하였다고 응답함. 직접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133명 중 67.1%가 '연락 없이 주거지·직장 기다림'을, 63.1%가 '지나친 전화·문자'를 경험하였으며, 그 외에 모욕, 협박 등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피해 유형도 각각 17.6%, 16.7%에 달함
 - 데이트폭력은 2011년에 총 11,840건이 발생한 이후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총 13,965건이 발생하였고, 그 중 살인 등 강력범죄는 2년 평균 752건, 상해·폭행 등 폭력범죄는 2년 평균 9,291건이 발생함

○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양형의 역할

- 기존 양형기준에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 반영

- 여전히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선고형을 부과하거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범인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온정적 판결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형량결정에서 양형인자가 부당하게 고려되거나 불균형하게 고려되고 있으며, 한편 법원이 판결문에 양형기준 적용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순히 양형기준표에 열거된 사유를 나열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아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나타나고 있음
 - 그 이유는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관행을 기본으로 정해지는데에 있는 것으로 추측됨. 따라서 양형관행에 따르기보다 피해자, 수사기관,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올바른 양형기준을 수립해나갈 필요가 있음
- 처벌불원의 의미 내용 강화 및 특별양형인자로서의 위치 재고
- 성폭력범죄는 재산범죄와 같이 피해회복이 금전으로 가능한 것이 아닐뿐더러, 현실에서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2차 피해 등 현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높고, 나아가 성폭력범죄자 내지 잠재적 성폭력범죄자에게 성폭력을 범해도 합의만 이루면 가벼운 형벌을 받는다는 인식은 성폭력범죄의 예방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 따라서 피해자의 합의를 반영하더라도 적어도 감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배제하여야 함
- 가정폭력범죄와 데이트폭력범죄 유형에서의 양형기준 적용
-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의하면 상습상해는 제1유형인 일반상해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양형인자로서 고려될 뿐임. 이로 인해 폭력범죄의 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특수상해·누범상해에 속하지 않는 한 가정폭력의 상습성은 다른 특별양형요인들과 함께 가감되며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 보복목적 상해는 일반적인 상해의 제4유형으로 위치하며 죄질의 불량요소가 고려되어 기본 형량부터 가중요소가 고려되어 있는바, 가정폭력범죄가 죄명에서부터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나)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승인)가 「젠더폭력 범죄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 발표에 대한 토론

- 성범죄 양형의 역할은 “중한 것은 중하게” 여야 함. 어떠한 것이 중한 것인지는 아는 사이의 범행보다는 모르는 사람의 범행이, 초범보다는 재범이, 일반적 범행보다는 흉기·위험한 물건·2인 이상·폭행·협박 등을 사용한 범행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분명하지 않았던 경우보다는 분명히 표현된 경우의 범행이, 사후적으로 처벌불원의사나 합의가 있었던 범행보다는 처벌불원의사나 합의가 없었던 범행이 더 중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범죄임
- 처벌불원은 성범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인 이상 감경요소로 반영되는 것이 타당함.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로서는 처벌불원을 통한 경제적 보상이, 피해자가 피해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기에 꼭 필요한 경우도 있음

- 가정폭력범죄는 주취상태에서 범한 것일 경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일 경우, 재범(검거 횟수가 아니라 폭력 횟수와 지속성을 의미)일 경우, 미성년 자녀가 존재할 경우, 접근금지 명령 등을 위반한 것일 경우,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일 경우 등에서 더욱 가중된 처벌이 필요함

(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가 「젠더폭력 범죄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 발표에 대한 토론

- ‘성적 수치심’은 1953년 형법 제정 시 제32장의 제목을 “정조에 관한죄”로 명명했던 그 시점에 고착된 개념으로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할 정조를 잃은’ 피해자에게 강요되었던 감정임. 지금은 정조의 틀은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해도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태도가 정숙하지 못했다’거나 ‘오히려 유혹했다’ 등 의심과 비난의 연장선에서 유지되어오면서 여전히 피해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개념임. 성폭력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통념이 스며들어 왜곡된 인식을 존속·유지시키는 ‘성적 수치심’이란 용어는 이제 관련법과 양형인자에서 삭제되어야 함
- ‘진지한 반성’과 관련하여, 오로지 감형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듣고, 단체에 후원금을 일방적으로 납부하고, 다시는 성폭력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반성문을 쓰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괴롭히는) 등의 행동은 피해자가 아닌 재판부를 향해 있음. 진지한 반성 여부가 감경요인으로 자주 고려되다는 점을 악용한 반성문 대필 사이트 등이 성행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반성문을 사고파는 부작용도 눈 여겨 보아야 함. 반

성 여부의 판단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고, 그 기준점은 합리적이고 ‘피해자 중심적’이어야 함

- ‘처벌불원’과 관련하여, 어떻게든 합의를 통해 감경을 받아내고자 하는 피고인들의 집요한 접근이 이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2차 피해가 발생함 / ‘공탁’ 관련, 피해자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피고인이 감형을 위해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을 한 것을 근거로 감경을 해주는 것은 유전무죄의 악습을 이어가는 것임
- ‘성폭력 2차 피해’는 가중 사유로 둘 필요가 있음. 심리적·시간적인 고충을 겪는 것을 방지하고 현재 진행되는 형사절차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함.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경우에는 감경하는 방안도 제안함.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는 태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피해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라) 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젠더폭력 범죄의 실태와 양형의 역할」 발표에 대한 토론

- “디지털 성범죄”, “성범죄”, “성매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등 다기한 형태로 발생하는 젠더 폭력은 그것들이 젠더 폭력으로서의 “동종”으로 적극 고려되어야 함
- 양형 판단의 과정은 그저 해당 사안에 대해 법리를 적용하여 해석하고 적정한 가해자 처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젠더폭력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정의하고 명명하는 힘과 사회적 효과를 갖고 있음

- 내부자적 행위로 여겨졌던 판결문 작성은 오늘날 현존하는 젠더 관계를 재/생산 혹은 변화시킬 수 있는 발화행위로서,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진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양형 기준의 합리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범 감정’에 부응하기 위한 시민적 서비스나 관련 책무라기보다는 해당 사안에 대한 젠더 관점의 이해와 설득, 사회정의 구성에 스스로 연루되는 과정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함

(2) 2세션 「젠더폭력 범죄의 양형기준 개선방안」 - 주제발표 및 토론

(가) 김정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젠더폭력 범죄의 양형기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

○ 젠더폭력 특수성을 감안한 양형기준 개선점 논의의 방향 설정

- 검토 방향

- 젠더폭력 관련 범죄 자체에 관한 양형기준이 따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아래 네 가지 방향을 설정함

- ① 적용되는 범죄군에서 독립된 유형으로서 젠더폭력 범죄 유형 설정
- ② 젠더폭력과 관련한 새로운 양형인자의 도입
- ③ 기존 양형인자 개념의 수정
- ④ 새로운 법률이나 신설 조문에 따른 범죄의 양형기준 적용 대상으로 의 편입

- 유형 분류의 타당성 및 새로운 유형 설정 가능성
 - 교제살인 범죄에서 살인범죄 양형기준상으로는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으로 분류되나, 사안에 따라 보복살인 등 비난 동기에 가까운 경우에는 보다 중한 유형으로 분류되도록 유형을 정비할 필요 있음. 또한,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과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을 하나로 묶고 그 안에 세밀한 항목 분류를 설정하면서 최소한 교제살인을 독립된 항목으로 명시하는 등 방안 강구하여야 함
- 기존 양형인자 개념의 수정 필요성
 - 교제살인의 많은 사건에서 범행 장소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점, 살인 이전에 크고 작은 폭력행위들이 선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서는 두려움이나 공포심, 인적 신뢰관계 등을 이유로 신고 등 절차를 조기에 취하기 어려운 점 등 교제살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개념을 보다 세심하게 규정함으로써 교제살인 사건 중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히 명백한 경우 이를 특별가중요소로서 무리 없이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음
 - 데이트폭력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계속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경우가 많고 특별히 원한이 있거나 보복 감정이 생길 여지를 흔히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를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로만 정의하면 양형인자 적용에 있어 데이트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확성을 담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데이트폭력은 분명히 교제하는

사이에서 신뢰관계를 나쁘게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동기에 특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양형인자 개념의 정교한 수정이 요구됨

- 젠더폭력과 관련한 새로운 양형인자의 도입
 - 젠더폭력 관련 판결문 양형이유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특별한 신뢰관계 이용’이나 ‘지속적 폭력 행사 및 행위태양의 위험성 증가’ 등과 같은 내용을 가중요소로서 상정할 수 있음
 - 피고인의 미성숙한 분노, 데이트폭력의 위법성과 위험성에 대한 피고인의 둔감하고 왜곡된 태도를 사건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판결문 양형이유가 있음. 피고인의 유년 시절의 가정불화 등 문제에서 비롯되었을 수가 있으나, 그러한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을 양형인자로 참작하는 것과는 별개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로 인해 교제하는 사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예기치 못한 희생이 발생한 부분을 사회적 문제로 보아 이를 양형에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새로운 법률에 따른 범죄의 양형기준 적용대상으로의 편입
 - 스토킹범죄처벌법의 취지 및 내용을 되새긴다면 스토킹행위로 정의되는 각 범죄들을 그 행위태양에 해당하는 기존 양형기준에 개별적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거나 불가능한 부분이 있음. 통상 스토킹범죄처벌법 제2조 1호의 각 행위들 중 몇 개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안도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스토킹범죄 자체를 다루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나) 김재남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의정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이 「젠더폭력 범죄의 양형기준 개선방안」 발표에 대한 토론

- 데이트폭력 범행은 연인에 대한 비뚤어진 집착과 행동 통제 과정에서 분노가 폭력으로 표출된 것으로 양형에 있어서 그 개별적 폭력의 이유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교제하는 사이에서 신뢰관계를 나쁘게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동기에 특이점이 있음. 따라서 폭력범죄의 가중요소로서의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에 ‘결별 요구에 대한 불만·보복, 교제 내지 만남 강요’ 등을 포함시키고, 교제 관계를 포함하는 ‘신뢰관계의 이용’, ‘우월적 지위의 이용’이라는 양형인자를 가중요소로 도입하여야 함
- 데이트폭력 범죄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적·정신적 피해 뿐 아니라 그로인해 피해자가 주거지, 직장 이전 등 생활 터전을 옮기는 경제적·사회적·정신적 피해가 야기되는 경우도 있음. 현행 양형기준으로는 이러한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움. 또한, 데이트폭력 범죄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러한 점도 양형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함
- 데이트폭력 범죄는 반복되고 중대 범죄로 발전할 위험이 있으며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내밀한 정보까지 알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의 고통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 사건 처리 기준에서 가중인자로 하고 있는 ‘주거침입 등 위험 동기가 추정되는 경우’, ‘약점을 이용하여 협박한 경우’를 양형인자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다)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가 「젠더폭력 범죄의 양형기준 개선방안」 발표에 대한 토론

- 굳이 젠더폭력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현행 양형기준으로 젠더폭력을 포섭할 수 있는 살인범죄, 폭력범죄 등에 젠더폭력의 특수성, 즉, ‘행위 지속성·반복성, 신뢰관계 이용, 피해 정도·위험성 증가’ 요소를 양형인자로 추가한다면 젠더폭력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함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이 완전히 새로운 법률로 젠더폭력을 규율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그 범죄에 맞는 양형기준을 새로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성이 있음

(라)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젠더폭력 범죄의 양형기준 개선방안」 발표에 대한 토론

- 젠더폭력 범죄유형을 독립된 유형으로 설정하는 것은 젠더폭력 개념 자체가 특정 범죄유형을 지칭한다기보다는 불평등한 성별질서의 실천 속에서 발생하거나 사법적으로 다루어지는 측면을 부각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음.

오히려 살인범죄 및 폭력범죄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고 데이터폭력과 같은 젠더폭력의 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양형인자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양형인자 개념을 수정하는 방향이 젠더폭력의 개념상 보다 적절한 양형기준의 개선방안이라고 판단됨

- 젠더폭력 관련 범죄의 관대한 양형 태도는 주로 벌금형 선고로 나타나는데, 벌금형 등 형종의 결정 및 벌금형 자체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기 때문에 젠더폭력관련 범죄의 양형기준을 개선하는 실질적 효과가 낮을 수 있는 한계가 있음. 형종 결정 및 벌금형 양형기준의 마련에 있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 있음

VII. 양형기준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1. 개요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하여 양형위원회규칙 제11조,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 국회,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였고, 법원조직법 제81조의12 제2항,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행정예고 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대상 기준안

- 양형위원회 제112차 회의(2021. 10. 8.)에서 의결한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2) 조회 기간

- 2021. 10. 15. ~ 2021. 11. 15.

(3) 회신 기관

- 100개(국회 11개 상임위원회 포함) 조회 대상 기관 중 9개 기관이 회신
- 각급 법원, 다시함께상담센터,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여성가족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의전화

(4) 회신자료

- 별첨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자료」 와 같음

2.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 회신

가. 각급 법원

(1) 서울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대정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울산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사법정책연구원 : 각 의견 없음

(2)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단독)

(가) 현행 합의 관련 양형요소의 문제점

▣ 개별 범죄군별로 양형기준을 설정·수정하여 온 결과 유사한 양형인자나 집행유예 참작사유가 의미 없이 제각각으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어 전체 범죄군에 걸쳐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수정할 필요 있음

◎ 제1유형-처벌불원

: 성범죄(일반), 성매매범죄 중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디지털 성범죄, 강도범죄, 배임수재, 절도범죄, 공무집행방해(중상), 공무집행방해(경상), 식품·보건범죄 중 부정의료행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살인, 약취등, 체포등, 업무방해, 근로기준법(칙취), 강도(치사), 지식재산권, 방화(치사상), 손괴(치사상), 업무방해, 주거침입,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교통범죄, 명예훼손, 성범죄(치사), 권리행사방해범죄, 공집방(특수치사상), 위증, 무고범죄

◎ 제3유형-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폭력, 손괴, 유가증권위변조, 채권추심법위반범죄

◎ 제4유형-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근로기준법(미지급), 부정수표발행등, 절도

◎ 제5유형-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횡령배임, 사기, 공갈, 방화,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장물

■ ☞ 한눈에 보기에다 과연 어떠한 의도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인지 의문이 있음. 예컨대, “처벌불원”만 양형요소로 정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되었다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더라도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기한 것인지 의문이고, 제2, 3 유형의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공통적으로 포함되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는 제3유형에만 양형요소로 규정되어 있는데, 제2유형의 범죄도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연 어떤 차이가 있어서 제3유형에만 해당 문구가 추가된 것인지 의문이었음. 용어를 통일하는 등 전체적으로 일관성, 통일성에 관한 정비가 필요한 상태였다는 점에 적극 동의함

(나) 수정안에 대한 의견

■ 규정 방식

■ 개인(1-1, 1-2)/ 개인 및 국가·사회(2-1, 2-2)/ 국가·사회
(3)

◎ 크게는 ① 개인적 법익, ② 개인 및 국가·사회적 법익,
③ 국가·사회적 법익으로 나누어 규정

- ◎ ① 개인적 법익 중 범죄군의 특성에 따라 ㉠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을 동일하게 특별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취급하는 1-1 범죄군과 ㉡ “처벌불원”¹⁾만을 특별감경인자 및 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취급하는 1-2 범죄군의 두 가지로 나눔. 한편 1-1, 1-2 범죄군 모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일반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정하고 있음
- ◎ ② 개인 및 국가·사회적 법익 중 범죄군의 특성에 따라 ㉠ 개인적 법익에 대한 보호 정도가 비교적 강한 2-1 범죄군과 ㉡ 그렇지 않은 2-2 범죄군의 두 가지로 나누고, ㉠ 2-1 범죄군의 경우에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특별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일반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각 고려하고, ㉡ 2-2 범죄군의 경우에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일반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만 고려함
- ◎ ☞ 위와 같은 체계적인 분류는 종래에 비하여 높은 체계적 정합성과 간결성, 명확성을 획득하였다고 보여 바람직함
- ◎ ☞ 다만, 명확한 분류에 수반되는 반작용으로, 개별범죄가 속하게 되는 범죄군 분류의 측면에서 이견이 있을 수

1) 실제로 합의에 이른 것이 아닌 이상 “합의에 준하는 피해 회복” 개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범죄군. 수정안에서는 “성범죄, 성매매(1-가 유형: 19세 이상에 대한 성매매 강요), 디지털성범죄(2, 3, 4, 5유형)”이 이에 속한다.

있음

- 예컨대, 개인적 법익 중 사실상 ‘합의에 준하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란 있을 수 없다는 전제에서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로 정하고 있는 1-2 범죄군에는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및 일부 성매매”만이 속하게 되는데, “살인”이나 “중상해”등 다른 일신전속적, 비재산적 법익 침해에 관한 죄들도 범죄 역시도 합의에 준하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자신(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진정한 용서가 피해 회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아닌지, 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업무상/중)과실치사 등의 경우 오히려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이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므로 같은 논리라면 위 범죄들에 대하여는 “유족들의 처벌불원”조차도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만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성범죄만을 지나치게 특별하게 취급하여 1-2 범죄군으로 분류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견이 있음
-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2-1 범죄군이 아닌 2-2 범죄군에 포함되었는데, 만약 2-1 범죄군으로 분류된다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특별감경인자로 들어가게 되어 단순한 금전 공탁만으로도 특별감경인자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임. 이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사실상 공무원 개인의 생명 및 신체적 법익 역시 중요한 보호법익으로 보호하고 있고 그것이 국가·사회적 법익보다 하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해당

공무원은 침해된 자신의 개인적 법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상부의 지시나 결재를 요한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이유로 들어 공무원 개개인의 고유한 권리행사를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서 2-1 범죄군에 포함하여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종래와 같이 특별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주요 긍정사유로 삼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 용어의 정비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특별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단 개인 및 국가·사회적 법익 2-2 유형에서는 일반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일반 긍정사유)

- ◎ 종전 양형인자 중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를 통합하여 정의 규정을 신설함.
- ◎ 정의 규정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요구함으로써 피고인의 반성·뇌우침이나 합의 노력 없는 공탁 등 단순히 경제적 보상만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 해당하지 않도록 적용 범위 제한함.
-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공박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히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존재하는바(민사사건에서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합의무효 및 반환청구가 인용될 정도의 사안도 있었음), 많은 범죄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을 처벌불원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에는 못 미치되, 양형에서 유의미하게 고려할 만한 수준의 피해 회복을 핵심요소로 함

◎ 이와 같은 기준을 다양한 범죄에 걸쳐 일관되게 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불완전한 정의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양형재량권 행사를 통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정의 규정을 두지 않음

■ 🖐 종래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가지로 표현되던 용어를 통일성 있고 간결·단순하게 정리하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임

■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자칫하면 실질적인 회복 조치 없이 노력만으로 유리한 양형인자가 될 수 있다는 오해를 줄 수 있어 독자적인 양형인자에서 삭제되었음.²⁾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면 결국 그것이 실제 피해회복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일반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로는 고려할 수 있도록 양형인자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3) 인천지방법원

■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 수정안 중,

◎ 특별양형요소 중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일반양형인자 중 가중요소로 ‘합의시도 중 피해야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2) 다만, 방화범죄에서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은 화재 확산으로 추가피해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일반감경인자로 존속됨.

◎ 이렇게 양형인자를 설정할 경우 특별양형요소의 적용이 양형(특히 양형기준 하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만 얻어내면, 결론적으로는 특별양형요소로서 양형 감경의 이익을 얻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처벌불원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충분히 감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동, 장애인, 외국인 등 2차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피해자의 경우에 ‘합의시도 중 피해야기’한 경우에는 위 합의시도의 결과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하더라도,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다시함께상담센터

본 센터는 이번에 전체 범죄군에 걸쳐 합의 관련 양형기준을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수정하고자 노력한 양형위원회의 작업과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근래에 상세하게 검토한 바 있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의 기준이 된 감수성과 범죄 특성인식을 선제적 바탕으로 하여, 전체 범죄군을 일괄 정리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이번 수정안이 재판부의 형량범위와 집행유예 결정에 중요한 기본 원칙이 될 예정인 만큼, 본 센터는 성매매 피해상담소로서 성범죄/성매매/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몇 가지 의견을 드립니다.

I

피고인 중심의 양형기준 적용 배척

○ 진지한 반성, 합의 여부 및 노력, 수사 협조, 피해확산을 위한

실질적 조치 등 범죄 실행 이후에 보이는 측정불가한 태도적 측면을 해당 범죄 처벌 수위에 반영하는 기준 배제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고령’,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부양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등의 조항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특히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연관성이 있거나’ ‘증거를 은폐’하는 등의 가학성과 적극성은 가중요소로 추가 고려 제안

2

성매매 등의 고유한 범죄 특성 고려

- 성범죄/성매매/디지털 성범죄는 1-2 범죄군에 속하여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로 두었으나, 여전히 그 범죄의 특성상 그루밍과 2차 가해 가능성이 높은 후한 상황에서 처벌불원의사가 유의한 요소로 작용할 경우 피해자의 심적 압박과 고통을 초래할 우려 상당함
- 본 범죄 피해는 예측불가한 확장가능성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고 이들에 대한 성적 착취 행위를 정상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소지, ‘경미한’ 피해 등 피해자가 경험한 불안에 배치되는 용어와 시각 경계
- 해당 범죄들은 대표적인 암수범죄인만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곧 초범을 뜻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는 처벌수위의 하한선에서 적용토록 하고 감경요소에서 배제

3

기타

-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반영하여 p. 66~68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수정 요함

다. 대한법무사협회

- 양형기준 수정안에 찬성하므로 달리 제시할 의견이 없습니다.

라. 대한변호사협회

(1) 제안이유

개별 범죄군별로 양형기준을 설정·수정해 온 결과 유사한 양형 인자나 집행유예 참작사유가 체계적·통일적으로 규율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전체 범죄군에 걸쳐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2018년 양형연구회 제1차 심포지엄에서 합의 관련 양형요소의 통일적인 규율을 위한 주제발표 및 토론을 한 바 있음. 또한, 제 7기 양형위원회에서 전체 범죄군에 걸쳐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정비하기로 결정하였다가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추가하면서 양형위원회 업무 부담을 이유로 이를 디지털 성범죄에 축소 한정하여 검토한 바 있음.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형량범위와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데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원칙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현재 양형기준이 설정된 모든 범죄군에 걸쳐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체계적·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44개 범죄군 양형기준 중 성범죄, 교통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폭력범죄, 명예훼손범죄, 주거침입범죄, 공갈범죄, 손괴범죄 양형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양형기준(이하 ‘대상범죄군’)을 대상으로, 양형인자표, 양형인자의 정의, 집행유예 기준에서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정비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2) 주요내용

대상범죄군 중 개인법익에 대한 범죄는, ①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을 처벌불원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범죄군(1-1 범죄군)에서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을 특별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로 보고, ② 처벌불원에 준하는 피해회복을 인정하기 어려운 범죄군(1-2 범죄군)에서는 특별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로 「처벌불원」만을 두기로 하고, 1-1 범죄군과 1-2 범죄군 모두 「상당금액 공탁」, 「일부 피해회복」을 일반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에서 삭제하고, 「상당한 피해회복(공탁포함)」을 추가함.

개인 법익과 국가·사회 법익을 함께 보호하는 범죄는, ① 개인 법익도 상당 정도 보호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범죄군(2-1 범죄군)에서는 앞서 본 개인 법익에 대한 범죄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② 나머지 범죄(2-2 범죄군)에서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만을 일반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 일반 긍정사유로 규정함.³⁾

일부 범죄에만 있던 일반가중인자인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⁴⁾를 피해자 있는 범죄 전반(제1, 2범죄군)에 걸쳐 일반가중인자 겸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로 추가하고, 명칭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로 통일함.

(3) 검토의견 : 일부 찬성·일부 수정의견

(가) 결론의 요약

수정안의 수정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양형인자 정의에서(피해회

3) 순수한 국가·사회 법익에 대한 범죄는 합의 관련 양형인자 등을 따로 두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결정하고 현행 양형기준을 유지하기로 하여 수정하지 아니하였음.

4) 별도 범죄(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하는 경우도 있음.

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결합하여)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 피해를 회복시킨 것을 실질적 피해회복으로 보는 부분은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범죄에서 전체 양형인자 정의의 통일성을 위해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정의견입니다.

(나) 구체적 검토

1) 수정 방향 - 찬성

대상범죄군에서 통일성 없이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양형인자와 양형인자 정의,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수정하여, 개인법익에 대한 범죄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을 처벌불원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범죄군(1-1 범죄군)과 처벌불원에 준하는 피해회복을 인정하기 어려운 범죄군(1-2 범죄군)으로 나누고, 개인 법익과 국가·사회 법익을 함께 보호하는 범죄는, 개인 법익도 상당 정도 보호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범죄군(2-1 범죄군)과 나머지 범죄(2-2 범죄군)으로 나누어 하나의 일관된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수정 방향 자체에는 동의합니다.

또한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를 일반가중인자 겸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로 추가하는 것에도 찬성합니다.

2) 손해액의 2/3 이상 회복시킨 것을 실질적 피해회복으로 보는 양형인자 정의 - 수정

현행 양형기준은 처벌불원과 함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특별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로 보면서 상당 금액 공탁을 일반감경인자로 보는 범죄군(예: 살인범죄)이 있고, 처벌불원과 함께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로 보는 범죄군(예: 횡령·배임범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일관된 기준으로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정비하기로 하면서, 일반감경인자인 상당 금액 공탁을 “상당한 피해회복(공탁포함)”으로 통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행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로 보고 있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와 구별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특별감경인자는 “실질적 피해회복”으로 용어를 변경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결과 과거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의 정의와 동일하게 양형인자 정의에서는 “손해액의 2/3 이상 회복”시켰다면 실질적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선인 손해액의 2/3는 결국 약 66%인데, 손해의 약 66%를 회복하였다고 하여,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손해의 약 66%를 회복하였다는 것이 일반 국민이 인식하는 실질적 피해회복이라는 개념을 충족하는지 의문입니다.

실질적 피해회복이라는 개념을 유지한다면 적어도 2/3이 아니라 그 이상을 최저선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3 보다 더 높은 최저선을 설정하더라도, 그에 이르지 않은 피해

회복도 상당한 피해회복으로서 일반감경인자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으며, 피해자가 손해액의 2/3 정도만 회복되었는데도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다면 여전히 특별감경인자나 집행유예의 주요긍정사유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손해액의 약 66%만 회복시킨 경우를,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양형인자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3) 비재산적 범익에 대한 범죄의 양형인자 정의에서 손해액의 2/3 이상 회복시킨 것을 실질적 피해회복의 내용으로 명기하고 있는 것 - 수정

양형기준 수정안은 비재산적 범익에 대한 범죄로서 재산적 피해가 문제가 되지 않은 범죄군(예: 살인범죄, 위증·증거인멸범죄, 무고범죄 등)에서도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 회복시켜 준 경우를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의 양형인자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형인자 정의를 대상범죄군에서 통일되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명백히 해당 범죄에서는 상정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포함시켜서 개별 양형기준으로서의 적합성을 포기해야 하는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개별 범죄군 양형기준 중에는 양형인자 정의 부분 각주로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라고 명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명시를 고려하더라도 구체적 범죄군에서의 적합성을 위해 일정부분 통일성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수정안에서 예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범죄에서는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을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의 양형인자 정의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마. 여성가족부

- 성매매범죄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은 없으나, 성매매처벌법 제 18조 제2항의 법정형은 최소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양형기준(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2유형)은 6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법정형과 충돌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 중 ‘사회적 유대관계’ 관련

- 여러 연구논문 등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의 경우에 범죄에 빠질 가능성도 크다고 나옵니다. 한부모 가정 등 결손가정이라는 환경, 그로 인한 빈곤이라는 환경 때문에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만약 결손가정이라는 환경을 집행유예를 결정할 때 부정적 요소(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한 요소로 고려)로 보게 되면 부당한 차별을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일선의 판사들 역시 이런 편견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큼니다. 좀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결손가정이라는 환경이 사회적

유대관계와 관련하여 부정적 요소(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하다)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주셨으면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중 ‘임금 등 미지급’

- 특별양형인자로 감경요소에는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가중요소로는 ‘악의적인 미지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는 위 내용은 집행유예 기준에도 각 긍정적 요소, 부정적 요소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양형기준이 대부분 경미한 처벌(벌금형),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주’가 아니라면 회사라는 법인격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대표이사라는 법인격은 민사책임에서 분리됩니다. 임금체불 사업장의 경우를 보면 회사는 자산과 지급 여력이 없는데, 대표이사 개인은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특히 사실상 개인소유 기업(회사라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나, 대표이사 개인 회사와 다름없는 경우)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상의 개인소유 기업인 경우에 평소 회사의 이익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상당 부분 이전됩니다. 그 방식은 합법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노동자로서는 잘 알기 어려운 방법으로 이전되어 재산이 그 개인이나 그 가족에게 축적됩니다. 정작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을 하려고 보면 회사는 자력이 없고, 그 개인인 대표이사나, 그 가족 명의로 된 자산은 상당히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 절차, 검찰의 수사절차에서도 해결이 안되어 기소가 되었다면 그 피고인은 ‘어짜피 임금체불은 벌금형 정도일 것이

니, 벌금형을 받는 것이 낫지, 굳이 임금채불을 일부라도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 양형기준을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면, 회사가 어려워졌고 지급여력이 없을 정도이니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채불액수가 커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에 긍정적 요소가 됩니다. 또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이유 때문에 ‘악의적인 미지급’은 아닌 것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 임금채불은 노동력 절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임금은 노동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부양하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임금채불 행위 자체가 한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를 민사 문제로 바라보는 편견을 가진 일선 판사들이 시각이 교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 특별히 반의사불벌죄로 한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평소(회사가 잘 나갈 때에) 회사의 이익의 상당 부분이 실질적인 소유자인 대표이사 개인과 그 가족에게 이전되는데,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 것은 중하게 처벌 받아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로 한 이유는 그러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진하고자 한 것입니다. 회사에 자산과 지급여력이 충분한 경우라면 그 사건이 형사재판까지 갈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 아래에서 보듯이 임금채불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고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임금체불 전체 현황(신고사건+근로감독) 분석 : **2020년 임금체불 규모 감소는 착시효과, 사실상 규모 여전히**
 : 2016년~2019년 임금체불피해 노동자수와 임금체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가 2020년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매년 증가하며 50만 명 후반대를 유지하다가 2020년에 약 41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임금체불액은 매년 증가하여 2019년에는 1조 8,391억 원으로 사상최대액을 달성했다가 2020년에는 1조 6,393억 원으로 감소함. 코로나19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임금체불액이 감소한 것은 근로감독 실시업체가 1/5 수준으로 감소하여 임금체불 적발사례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임. 임금체불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임금체불은 피해노동자 약 41만 명, 피해금액 1조 6,393억 원으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2020년 임금체불 규모 감소는 착시효과이고, 사실상 임금체불 규모는 여전히하다고 평가됨.

☞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를 가장 기본적인 **양형 가중요소, 집행유예 부정적 요소로 명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양형 관행이 없어져야 합니다. 징역형을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집행유예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 가족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임금체불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3)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 관련

(가) 양형인자 감경요소와 집행유예 기준의 긍정적 요소로 명시된 ‘보험가입’부분은 삭제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가 ‘의무가입’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고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소급적으로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문제만 남음). 따라서 가입여부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 개인의 양형인자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별도로 사보험을 가입해두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이 이뤄지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 자체가 양형인자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이나 회사가 손해배상 등을

통해 상당한 피해회복을 하였으나 정도가 양형요소로 고려되면 충분합니다.

- (나)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또는 대표이사와 안전보건관리자의 책임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에 그에 맞게 양형기준의 수정도 필요합니다. 도급인이나,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이고, 이들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는 충분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도급인과 대표이사와 같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형사처벌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임에도 이를 수급인에게 맡겨두고 스스로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하위 관리자에게 맡겨두고 스스로 책임과 노력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가중요소’와 ‘집행유예 부정적 요소’로 명시해야 합니다.

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과 범죄군 분류

그동안 실무상 본래 합의에 적합하지 않은 국가·사회적 법익 침해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범죄 과정에서 피해를 본 자가 있기만 하면 그와 합의를 보아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부는 선처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예를 들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를 저지르고 문서의 명의인과 합의를 보거나, 뇌물수수죄를 저지르고 뇌물을 제공한 자에게 금원을 반환하였다고 하여 선처를 해왔던 것 등). 이러한 관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어왔습니다.

따라서 수정안과 같이 보호법익에 따라 범죄군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다

시 처벌불원에 준하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개인 법익에 대한 범죄) 또는 개인 법익을 상당 정도로 보호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개인 및 국가·사회 법익에 대한 범죄)에 따라 세분화한 뒤 이에 따라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규정한 것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 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나아가 합의 관련 양형인자가 없거나 불완전했던 증거인멸·증인은닉죄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등 범죄에 있어 양형인자를 보충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와 관련한 정비

피고인의 무리한 합의 시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범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았던 점을 반영하여 일부 범죄에서만 일반가중인자·집행유예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로 기재되어 있던 것을 피해자가 있는 범죄 전반에 걸쳐 규정하고 표준 정의규정을 마련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기존 정의규정에 ‘합의를 강요한’이라는 문언이 포함되어 있어 그 행위 태양이 강요에 한정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를 삭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수정안이 피고인의 합의 시도 자체를 위축하는 방식으로, 즉 방어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정의규정에 ‘단,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 내의 합의 시도로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의 문구를 보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정의 규정 정비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전체 범죄군에 걸쳐 체계적·통일적으로 수정할 경우 정의 규정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보충 의견을 개진합니다.

(가) 처벌불원의 정의 구성 요소 중 진지한 반성

회복적 사법 이념 구현의 측면에서 당사자의 합의란, 공동체의 화합·통

합을 전제로 하여 가해자의 뉘우침·깨달음 및 이를 통한 피해자의 용서가 재범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데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가해자 태도 요소로서 ‘진지한 반성(=진심으로 뉘우치고)’을 유지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피해자 의사요소에 비하여 규정이 다소 불명확·불충분하고 ‘진지한 반성’이라는 요소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일방적인 반성문 또는 탄원서의 제출 등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등의 문구를 보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만을 규정할 경우 자칫 실질적 회복 조치 없이 노력만으로도 유리한 양형인자가 될 수 있다는 오해를 줄 수 있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나 노력 없이 단순히 경제적 보상만 있는 경우 ‘실질적 피해회복’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경제적 보상(피해회복)’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실질적 피해회복’이라는 개념을 규정한 것은 타당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일방적인 공탁이 실질적 피해회복에 포섭되지 않도록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노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도의 노력이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피해를 회복하였지만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등으로 양형인자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기타

현행 양형기준에 따르면 ‘미합의’라는 양형인자가 3가지 범죄(횡령·배임 및 사기, 공갈 범죄)에서만 집행유예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정비하는 이번 수정안에서 ‘미합의’라는

양형인자가 정확히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등도 함께 검토하여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 한국경영자총협회

(1)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관련

- 임금 등 미지급 양형인자 중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운데 현행 ‘일부 피해 회복’을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으로 수정하는 것은 피해 회복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음.
- 수정안은 ‘일부’ 피해 회복을 ‘상당’한 피해 회복으로 변경했는데, 이는 과거(현행제도) ‘상당 부분 피해 회복’으로 오인될 수 있음.
 - ※ 현행 제도에서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은 재산범죄에서 피해액의 약 2/3 이상이 회복된 것을 기준으로 함. 이는 수정안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통일적으로 수정됨.
- 따라서 현행 ‘일부 피해 회복’과 수정안의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포함)’이 같은 수준의 피해 회복을 의미한다면 현행대로 ‘일부 피해 회복(공탁포함)’으로 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임.

<참고> 양형인자 정의

구분	요소	정의
현행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미지급액의 약 2/3 이상이 지급되거나 지급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일부 피해 회복	실질적인 피해 회복 수준에는 못 미쳤으나, 피고인이 범행 후 자발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
수정(안)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포함)	사회통념상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만한 피해 회복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일부피해회복’ 과 ‘상당금액 공탁’ 을 통일한 용어

- 임금 등 미지급 집행유예 기준 중 일반참작사유의 긍정적 참작사유 수

정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는바, 현행대로 ‘일부 피해 회복(공탁포함)’으로 하는 것이 보다 명확할 것임.

(2)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관련

○ 임금 등 미지급 양형인자 중 일반양형인자 가중사유로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추가하는 것은 가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 유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

－ 수정안은 피해 유형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가해자의 순수한 피해 회복 노력이 때에 따라 괴롭힘으로 주장될 수 있어 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을 축소시킬 수 있는바, 이를 피해 유형으로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임금 등 미지급 집행유예 기준 중 일반참작사유의 부정적 참작사유 수정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는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기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임금 등 미지급 양형인자 수정안 관련 경영계(안)

구분		현행	수정(안)	경영계(안)
특별 양형 인자	감경	-	▲ 처벌불원	의견없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미지급액의 약 2/3 이상이 지급되거나 지급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를 의미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	의견없음

			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	
일반 양형 인자	감 경	▲일부 피해 회복 - 실질적인 피해 회복 수준에는 못 미쳤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만한 피해 회복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일부피해회복’과 ‘상당금액 공탁’을 통일한 용어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일부 피해 회복(공탁 포함)’으로 수정
	가 중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합의 시도 과정에서 <u>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u> , 합의거절에 대한 유·무형의 불이익 암시 등 피해를 일으킨 경우	<u>정의규정 구체화</u>

임금 등 미지급 집행유예 기준 수정안 관련 경영계(안)

구분		현행	수정(안)	경영계(안)
주요 참작 사유	긍 정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삭제	의견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의견없음
일반 참작 사유	부 정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u>정의규정 구체화</u>
	긍 정	▲일부 피해 회복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	‘일부 피해 회복(공탁 포함)’으로 수정

자. 한국여성의 전화

- ‘처벌불원’⁵⁾, 여성폭력 양형기준(감경요소)에서 제외 필요
- 처벌불원은 가해자의 진실한 반성과 피해회복을 유도하려는 취지와는 달리 단지 수사·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감형(혹은 고소취하)받기 위한 전략으로 악용되고 있음.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비난이 큰 사회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끌어내기 위

5) 현행 양형기준 및 수정안에는 처벌불원에 관한 용어와 정의가 통일되지 않음. (예시. 성범죄 중 ①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양형인자로써 ‘처벌불원’과 ⑦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양형인자로써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등) 본 의견서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처벌불원’으로 표기함.

한 가해자측의 ‘합의 시도’는 더욱 교묘하고 악랄하게 진화하고 있으므로, 양형기준(감경요소)에서 삭제하여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가정폭력, 데이트폭력과 같이 단일 범죄명이 존재하지 않는 여성 폭력 범죄에도 처벌불원이 양형기준(감경요소)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여성폭력 범죄의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로 변경 필요

- 앞서 ‘처벌불원’에 관한 의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감형을 목적으로 한 가해자측의 ‘합의 시도’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 이에 피해자는 심각한 추가 피해를 보고 수사·재판 과정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됨.

-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도 피해자를 괴롭혀 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인식은 성폭력 범죄 예방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로 강화하여 다루는 것이 필요함.

○ ‘실질적 피해 회복’ 및 ‘상당한 피해 회복’에 대한 기준 구체화 필요

- 수정안은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나, 여성폭력은 재산범죄와 달리 손해 정도를 수치화하기 어려움. 여성폭력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피해로 인한 경제생활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단절 등 경제적·사회적 분야를 포함한 삶 전반의 피해를 경험함.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성범죄 등 여성폭력에서 ‘실질적(혹은 상당한) 피해 회복’ 정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 용어 통일 및 공탁에 대한 상세 기준 필요
 - 수정안은 ‘상당금액 공탁’을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포함)’으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성범죄, 폭력범죄, 체포 등 범죄, 손괴범죄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겸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에 여전히 ‘상당금액 공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또한,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의 해석에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감형을 목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가해자는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공탁을 하기도 함.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탁은 상당한(혹은 실질적) 피해 회복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로 변경 필요
 - 친밀한 관계처럼 인적 신뢰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은 피해자에게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끼침. 가해자는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 및 취약점을 많이 알고 이를 범죄에 활용하며, 관계 유지 및 회복을 위한 피해자의 노력을 이용하여 폭력과 통제를 행사함.
 - 따라서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의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인 ‘인적 신뢰관계 이용’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부부,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에도 이러한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 여성폭력에 대한 포괄적 접근 필요
 - 현행 양형기준에서 단일 범죄명이 존재하는 여성폭력은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에 불과함. 그러나 여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성매매, 불법촬영, 스토킹 등이 모두 해당함.

-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인자(가중요소)에 동종 누범 및 전과가 포함되어 있으나, ‘동종’의 범위가 불분명하며, 단일 범죄 명으로 존재하지 않는 유형의 여성폭력은 ‘동종’ 누범 및 전과로 인정되고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움. 따라서 모든 유형의 여성폭력 범죄에 대해 모든 유형의 여성폭력 범죄가 동종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명시가 필요함.

VIII.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1.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은 형사재판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양형기준의 공개는 양형기준 적용의 투명화, 적정화 및 양형기준 개선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양형기준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 제6조(양형기준의 공개)

- ①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공개와 함께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제20조(양형기준의 효력발생시기)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원회는 관보게재일 이후의 날을 지정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 공개 방법

- 관보 게재(전자관보 및 종이관보)
 - 관보게재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게재

4. 추진 일정

- 양형기준 의결 예정 : 2021. 12. 6. 양형위원회 제113차 회의
- 관보 게재 의뢰 : 2021. 12. 중순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 2021. 1. 중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IX. 2020 연간보고서 발간 · 배포

1. 개요

- 법원조직법 제81조의10 규정에 따라 양형위원회는 매년 연간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 연간보고서의 발간을 통하여 양형위원회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정리하고 대외 홍보에 활용하여 양형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 2021. 3. 29. 양형위원회 제108차 회의에서 ‘2020년도 연간보고서 발간계획안 확정 의결’ 의결

2. 추진 경과

- 2021. 3. 29. : 2020년도 연간보고서 발간 계획안 의결
- 2021. 10. 하순 : 초안 작성
- 2021. 11. 초순 : 견본 제작
- 2021. 11. 중순 : 교정 작업
- 2021. 11. 하순 : 인쇄의뢰 및 제작
- 2021. 12. 중순 : 국회보고 및 배부 완료

3. 발간 내역

- 발간 부수 : 1,600부
- 책자 규격 및 분량
 - 188×258, 2도 양면
 - 800여 쪽

4. 국회 보고

- 2021. 12.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에 공문 접수 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우편 송부

5. 기타 기관 배부

○ 배부원칙

- 연간보고서 책자의 적정한 배포 및 관리
- 예산낭비 방지 및 활용의 극대화

○ 배부기준

- 홍보가치와 경제성을 고려하여 활용도가 높은 기관에 우선 배부
- 필요적 이용기관과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배부
- 사법발전에 기여하거나 자료가치를 높이는 부서에 배부

○ 배부처

-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학회, 주요 도서관 등

X.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보고

1. 개요

- 운영지원단은 1심 판결문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형기준 적용현황을 점검하였으며, 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책자로 발간함
- 양형기준 적용현황의 정기적인 분석 및 보고는 운영지원단의 주된 업무임(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양형기준의 적용 확인)
지원단은 판결서에 기재된 양형의 이유를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의 적용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분석 목적

- 양형기준 활용 실태, 준수 여부, 적용 효과 파악
- 양형기준 개선사항 확인

3. 분석 대상

- 각 범죄군 양형기준의 시행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으로서,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사이에 1심에서 선고된 양형기준 적용 대상 사건

4. 분석 내용

- 양형기준 준수율, 양형이유 기재 여부, 특별양형인자의 유무에 따른 형량 비교분석, 특별양형인자와 형량과의 연관성 정도 등을 그 내용으로 함

XI. 전자표결시스템 도입

1. 도입 배경

- 양형위원회는 2007년 출범이후 280회가 넘는 회의(양형위원회의, 전문위원 전체회의, 자문위원회의 및 각종 소회의 등)에서 표결의 방식은 ‘거수’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제8기 양형위원회 출범을 맞아 더 정확하고 신속한 표결 방법 도입 추진

2. 전자표결시스템 방식

- 운영방식
 - 각 위원이 자리에 배치된 무선단말기로 표결을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선택 항목이 집계자의 노트북 컴퓨터에 바로 수집되어 확인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알려주거나 위원장의 단말기 화면에 표시되도록 하는 방식
 - 표결 결과는 회의별로 파일로 생성되어 다시 확인할 수 있음
- 시스템 도입의 장점
 - 신속성 : 위원들의 의사표시를 바로 확인하고 집계할 수 있어 회의의 빠른 진행에 도움
 - 편의성 : 거수 방식에 비해 위원 및 집계자의 수고로움 경감
 - 활용성 : 무선 방식이기에 회의장에 고정 설치할 필요가 없고 회의장 모양 및 인원제에 제한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함
- 도입 시기
 - 제143차 전문위원회 전체회의(2021. 11. 22.)에서 시범 운영
 - 제113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2021. 12. 6.)부터 도입

XII. 2022년도 운영지원단 업무 계획

	양형기준 설정·수정
1	<p>○ 추진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범죄군에 걸친 양형기준 설정·수정: 벌금형 양형기준 원칙 결정,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 양형기준 설정: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관세법위반 범죄 - 양형기준 수정: 아동학대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p>○ 추진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 6. 7. 제8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수정 관련 추진 업무 의결(양형위원회 제110차 회의) - 2021. 6. 21. 양형연구회 제6차 심포지엄 「아동학대범죄와 양형」 - 2021. 6. 23. ~ 7. 6. 아동학대범죄 제1심 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실시 - 2021. 8. 17.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 의결(양형위원회 제111차 회의) - 2021. 10. 8.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양형위원회 제112차 회의) - 2021. 10. 15. ~ 11. 15.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 2021. 11. 8. ~ 12. 10. 성범죄 제1심 사건에 대한 양형자료조사 실시 - 2021. 12. 6.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예정)(양형위원회 제113차 회의) <p>○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1.경 벌금형 양형기준 원칙안,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의결 - 2022. 1.~2. 벌금형 양형기준 원칙안,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2.경 벌금형 양형기준 원칙안 및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 - 2022. 3.경 벌금형 양형기준 원칙,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 2022. 4.~6.경 성범죄,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의결 - 2022. 7.~8.경 성범죄,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 기관 의견조회 - 2022. 8.경 성범죄,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의결 - 2022. 9.~2023. 1.경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관세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심의, 의결 - 2022. 10.~2022. 12.경 구체적인 범죄군에 대한 벌금형 양형기준안 심의, 의결 - 2023. 1.~2.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관세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구체적인 범죄군에 대한 벌금형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 2023. 2.경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관세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구체적인 범죄군에 대한 벌금형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 2023. 3.경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관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구체적인 범죄군에 대한 벌금형 양형기준 최종 의결
	소관부서: 양형위원회(기획운영과)
2	<p>양형정책 연구·심의</p> <p>○ 추진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과 형벌, 형사재판에 관한 근본이념과 양형 관련 다양한 쟁점들을 연구, 공론화하여 합리적이고 건전한 양형기준과 양형실무의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 - 특히,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국가기관, 실무계, 학계 등 각계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 <p>○ 추진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 3. 양형연구회 운영위원 회의 및 제6차 심포지엄 주제, 일시 등 선정 - 2021. 6. 21. 양형연구회 6차 심포지엄 「아동학대범죄와 양형」 개최 - 2021. 10. 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 2021. 10. 25. 양형연구회 총회에서 2022년 양형연구회 운영계획 확정 - 2021. 11. 8. 양형위원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심포지엄 「젠더폭력 범죄와 양형」 개최 <p>○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심포지엄 개최 : 2022년 심포지엄을 상반기(2022년 6월), 하반기(2022년 11월)에 각 개최하되, 하반기 심포지엄은 양형위원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 개최하는 「국제 양형 심포지엄」으로 대체 가능함(대체여부는 2022년 3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 - 연구주제 리스트화 :장기적인 연구를 위한 연구주제의 선정 필요성에 따라, 연구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리스트화할 예정 <p>소관부서: 양형위원회(기획운영과)</p>
3	<p>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 수렴</p> <p>○ 추진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수렴을 통한 양형기준 설정·수정 절차의 객관화·투명화 - 양형기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확보 <p>○ 구체적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변경 대상 범죄군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제8기 양형위원회 추진 업무 중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벌금형 양형기준 원칙안에 관한 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인 아동학대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 수렴 - 자문위원의 구성을 다양화하여, 양형위원회 활동과 양형기준안에 관한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 - 양형절차와 양형기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도를 높여 사법 신뢰도를 제고 ·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의견 수렴 ·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추가 제작 <p>○ 추진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변경 대상 범죄군 등에 대한 의견 조희 · 2021. 3. 22. ~ 4. 13. 법원·국회·법무부 등 관계 국가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의견조희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수렴 · 2021. 10. 15. ~ 11. 15. 법원·국회 등 관계 국가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의견조희 - 신규 자문위원 위촉으로 직역, 성, 연령 측면에서 다양성 확보 · 2021. 8. 신규 자문위원 11명을 위촉하여, 직역(종전 3개 직역에서 5개 직역 인사로 확대), 성(여성과 남성이 9명씩 동수로 구성), 연령(30대에서 60대까지 아우름) 면에서 다양성과 균형성을 도모함 -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추가 제작 · 2021. 12. 17.경 추가 콘텐츠(상해, 방화) 오픈(예정) <p>○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벌금형 양형기준 원칙안에 관한 의견수렴 · 2022. 1.~2. 법원·국회 등 관계 국가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단체 등에 대한

	<p>의견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2.경 공청회 개최 - 성범죄,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수렴 · 2022. 7. ~ 8.경 법원·국회 등 관계 국가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의견조회 - 자문위원의 자문 청취를 통한 의견수렴 · 2022년 자문위원단 회의를 개최하여, 양형기준안 중 주요 쟁점에 관한 자문 의견을 청취 - 양형절차와 양형기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사법 신뢰도를 제고 · 상시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비정기적으로 통계 산출 · 2021. 12. 오픈한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추가 콘텐츠 홍보 · 2022년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추가 제작 <p>소관부서: 양형위원회(기획운영과, 통계분석과)</p>
4	<p>양형기준 공개</p> <p>○ 추진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기준 관보 게재는 양형기준의 효력 발생을 위한 필수적 절차 -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양형기준 책자 등을 통하여 양형기준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 양형기준 제도 및 양형위원회 홍보 <p>○ 추진경과 및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최종 의결 후 1개월 내 관보 게재 -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새롭게 시행되는 양

	<p>형기준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 6. 『2021 양형기준』 책자를 발간하여 법원·국회·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언론기관 등에 배포 - 2022. 6.경 『2022 양형기준』 책자를 발간하여 법원·국회·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언론기관 등에 배포
	소관부서: 양형위원회(기획운영과)
5	2021 연간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p>○ 추진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그 연도의 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여 국회에 보고(법원조직법 제81조의10) <p>○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에 관한 위원회 의결 · 2021년도 양형위원회 주요 활동실적 및 2022년도 양형위원회 활동계획안 정리 - 2022년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 법원·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언론기관 등에 배포
	소관부서: 양형위원회(기획운영과)
6	외국 양형위원회 등과의 교류 및 「국제 양형 심포지엄」 개최
	<p>○ 추진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양형위원회 및 사법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양형기준제도 및 양형정책에 관한 정보 수집·양형위원회 운영 경험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양형기준 제도의 대외 홍보 <p>○ 추진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 대법원, 외국 양형위원회 방문 미 실시 - 양형기준 설정 관련 정책 수립 및 양형기준 제도 발전을 위한 외국 양형위원회와의 교류·협력, 우리나라 양형기준 홍보를 위해서 2021. 12.경 '2021 영문 양형기준' 발간(예정) - 양형위원회 영문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c/engsc/index.jsp)를 업데이트하고, '2021 영문 양형기준'의 내용 수록(예정) <p>○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8. ~ 11.경 외국 대법원, 외국 양형위원회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유럽 등 각국의 양형위원회와 사법기관을 방문하여 양형실무 및 양형정책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양형위원회 운영 경험 공유 · 2021. 12. 발간하는 '2021 영문 양형기준'을 교부하여, 한국 양형위원회의 성과 홍보 - 2022. 11.경 「국제 양형 심포지엄」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래 선진 형사사법국가의 양형위원회, 사법기관을 시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양형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해외 양형위원회, 사법기관 관계자와 각국의 양형 현실과 지향을 나누는 「국제 양형 심포지엄」 개최 ·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갖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 추진 <p>소관부서: 양형위원회(기획운영과)</p>
7	<p>양형자료분석관 운영점검 업무시스템 개선</p> <p>○ 추진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자료분석관의 양형기준 운영점검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사용

	<p>자인 양형자료분석관의 업무 향상에 기여하는 방안 마련</p> <p>○ 추진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자료분석관용 양형기준 운영점검시스템 개발 및 운용 · 2021년 시행된 양형기준 설정 범죄(디지털 성범죄,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및 양형기준 수정 범죄(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내용 시스템에 반영 - 양형자료분석관 업무능력 배양 · 2021. 1. 및 2021. 7. 양형자료분석관 인사이동에 따른 교육 실시(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 함양) · 양형자료분석관 정기토론회 매월 실시 <p>○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자료분석관용 양형기준 운영점검시스템 개발 및 운용 · 시스템 사용자인 양형자료분석관의 시스템 개선 요청 내용을 정리 및 취합하여 해당 내용이 시스템 개선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2022년 시행될 양형기준 설정, 수정 범죄(아동학대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등)에 대한 양형기준 내용 시스템에 반영 · 전산정보관리국과의 협조를 통해 개발이 완료된 시스템 수정·보완 - 양형자료분석관 업무능력 배양 · 2022. 1. 및 2022. 7. 양형자료분석관 인사이동에 따른 교육 실시 예정 · 양형자료분석관 정기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분석관 업무의 전문성 제고 <p>소관부서: 양형위원회(자료조사과)</p>
8	<p>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p> <p>○ 추진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결서에 기재된 양형의 이유를 분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의 적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위원회에 보고(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p>○ 추진경과 및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양형자료분석관들이 양형기준 적용대상 사건의 1심 판결문을 월 단위로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p>소관부서: 양형위원회(자료조사과, 통계분석과)</p>
9	<p>효율적인 양형 통계분석</p> <p>○ 추진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기 양형위원회에서 설정, 수정할 양형기준 관련 연구 및 기존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에 필요한 각종 통계분석 실시 -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제공을 통해 양형기준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 <p>○ 추진경과 및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자료분석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8기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범죄 및 기존 양형기준 적용현황에 대한 각종 통계분석 실시 - 통계프로그램(SPSS)을 이용하여 범죄군별 사건분포, 선고내역, 양형기준 준수여부 등과 관련된 통계 산출(2021년부터 4년간 신형 SPSS 통계 프로그램을 매년 하나씩 구입하여 활용할 예정) - 각종 양형인자에 대한 교차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 다양한 통계분석 실시하여 양형인자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파악 - 분석결과를 책자로 발간하여 위원회 보고 - 양형기준 수정 및 양형정책 수립 시 분석내용 반영 <p>소관부서: 양형위원회(통계분석과)</p>
10	<p>新양형기준시스템 개선·운영</p>

	<div data-bbox="293 291 459 331" data-label="Section-Header"> <p>○ 추진목적</p> </div> <div data-bbox="293 365 1417 539"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12. 新양형기준시스템이 개발되어 2019. 3. 정식 오픈 - 新양형기준시스템 사용자인 법관의 판결문 작성 시 이용 편의를 반영하기 위한 내용 반영 </div> <div data-bbox="293 580 459 620" data-label="Section-Header"> <p>○ 추진경과</p> </div> <div data-bbox="293 654 1417 1167"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업데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시행된 양형기준 설정 범죄(디지털 성범죄,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및 양형기준 수정 범죄(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내용 시스템에 반영 - 수정 필요 사항 지속 발굴 및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자/기타 인자인 처벌불원을 행위 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것인지를 묻는 팝업창 신설 · 긴 죄명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화면 조정 </div> <div data-bbox="293 1205 459 1245" data-label="Section-Header"> <p>○ 추진계획</p> </div> <div data-bbox="293 1279 1417 1783" data-label="List-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개정 등으로 발생하는 법정형 등 수정 반영 - 운영점검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한 양형기준 유사 판결문 검색 기능 시스템에 반영 -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련 이용 편의 내용 시스템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시행될 양형기준 설정, 수정 범죄(아동학대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등)에 대한 양형기준 내용 시스템에 반영 </div> <div data-bbox="293 1832 793 1872" data-label="Text"> <p>소관부서: 양형위원회(통계분석과)</p> </div>
--	---

XIII.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가. 개요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나. 회신 완료 접수의견(2021. 11. 1.까지 총 19건):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회신함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	2021.08.25.(1)	○ 성별에 따라 다른 형량에 대한 건의
2	2021.08.30. ~2021.10.14.(10)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청
3	2021.10.13. ~2021.10.26.(2)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아동관련 기관 취업 금지 요청
4	2021.08.12.(1)	○ 특수폭행치상 처벌 관련 질의
5	2021.09.06. ~2021.10.27.(2)	○ 살인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6	2021.10.27.(1)	○ 사기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7	2021.09.08.(1)	○ 사기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및 사기범죄와 관련하여 진지한 반성을 감경요소에서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

8	2021.09.28.(1)	○ 모든 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	----------------	--------------------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사건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하여야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아동학대범죄 전력자에 대한 아동 관련 기관 취업금지 등 구체적인 입법과 관련하여서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문의 내용은 양형기준이 아닌 형법에 관한 내용으로 그 법리상의 문제에 관하여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5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6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7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8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에 바란다를 통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다. 회신 미완료 접수의견(2021. 11. 1.까지 접수된 의견 중 미회신 의견, 총 5건)

- ▶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	2021.09.08. ~2021.10.27.(2)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모바일 버전 제공 요청
2	2021.11.01.(1)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청
3	2021.11.01.(1)	○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체험 대상 범죄 추가 요청
4	2021.11.01.(1)	○ 모든 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2. 서면 질의 등 민원 및 회신

가. ‘국민신문고 게시판’

- 회신 미완료 접수의견(2021. 11. 1.까지 총 4건)으로 빠른 시일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순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질의요지
1	2021.09.10.(1)	○ 형사범죄 관련 건의
2	2021.09.27.(1)	○ 개별 법률에 관한 질의
3	2021.10.14.(1)	○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질의

4	2021.10.14.(1)	○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건의
---	----------------	--------------------

나. 민원 우편

○ 회신 완료 접수건의(2021. 11. 1.까지 총 6건)

순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질의요지
1	2021.07.22.(1)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위반죄, 살인죄, 강간죄, 내란죄 형량 문의 및 양형기준 관련 문의
2	2021.08.07.(1)	○ 사기범죄, 횡령범죄, 마약범죄, 절도범죄, 성범죄, 살인범죄, 폭력범죄 양형기준 송부 요청
3	2021.09.07.(1)	○ 사기범죄, 살인범죄, 증권·금융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 송부 요청
4	2021.09.10.(1)	○ 사기범죄 양형기준 및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관련한 양형기준 송부 요청
5	2021.09.10.(1)	○ 개별 사건에 대한 민원
6	2021.10.12.(1)	○ 개별 법률에 관한 질의

○ 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21. 07. 22.자)에 대한 회신입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범죄, 살인죄, 강간죄의 양형기준은 구치소(교도소)에 비치된 「2021 양형기준」 책자의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살인범죄, 성범죄 양형기준을 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란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현재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에 따라 형량범위 상한을 1/2 가중하는 경우, 1/2 가중되는 ‘상한’은 양형기준에서 각 해당 범죄유

형으로 분류된 범죄 가중 영역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을 의미합니다. 또한,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종을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여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 권고적 기준에 해당합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21. 08. 07.자)에 대한 회신입니다.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에 따라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 양형기준」 책자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등 포함)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 양형기준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21. 09. 07.자)에 대한 회신입니다.

- 양형위원회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4항,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에 따라 관보 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양형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 양형기준」 책자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계기관(교도소 등 포함) 등에 배포하였으므로 그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 양형기준 코너에도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21. 09. 10.자)에 대한 회신입니다.
- 「2021 양형기준」 책자는 교도소 및 구치소 등 관계기관에 배포하였으므로 그 곳에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함을 참조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서와 함께 제출하신 우표와 인디를 붙임과 같이 반환하여 드립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5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21. 09. 10.자)에 대한 회신입

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 기관으로 개별사건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6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21. 10. 12.자)에 대한 회신입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 기관으로 개별 법률에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회신 미완료 접수의견(2021. 11. 1.까지 총 1건)으로 빠른 시일에 회신할 예정입니다.

순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질의요지
1	2021.10.29.(1)	○ 사기범죄의 양형기준 송부요청